



오늘의 새싹을 키우는 교육의 뿌리
초등교사노동조합

날 짜 : 2026.08.06..(목)
발 신 : 초등교사노동조합
수 신 : 교육담당기자

위원장 강석조 /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로134 14층 초등교사노동조합

[논평] 아이들 교육예산이 잘라내야 할 비계입니까

아이들 교육예산이 잘라내야 할 '비계'입니까

- 기획예산처 홍보영상에 드러난 교육재정 인식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 학령인구 감소가 교육재정 삭감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

기획예산처가 공식 유튜브 콘텐츠를 통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쓸데없는 비계'에 비유하며 지출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설명한 것에 대해, 전국의 초등교사들은 깊은 우려와 참담함을 느낀다. 국가재정의 비효율을 걷어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는 공감할 수 있다. 그러나 아이들의 교육에 들어가는 예산을 잘라내야 할, 건강에 나쁜 비계에 빚댄 것은 단순한 실언이 아니라, **재정당국이 교육을 국가의 미래를 위한 투자가 아니라 덜어내도 무방한 군살로 여기고 있다는 방증이다.** 교실에 한 번이라도 서 본 사람이라면, 아이들의 배움을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었을지 의문이다.

"줄이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은 사실이 아니다

영상에서 "먹는 사람은 줄었는데 요리는 그대로 하면 남는 건 버리게 된다"는 진행자의 말에 장관은 "정확합니다"라고 답했고, "줄이겠다는 것은 아니다"라는 해명은 그 뒤에 나왔다. 그러나 교육재정은 남아서 버려지고 있지 않다. 시도교육청의 적립기금은 최근 4년 사이 21조 4천억 원에서 3조 원으로 85.9% 급감했다. 교부금이 줄어드는 것도 사실이다. 현행법대로라면 2027년 교부금은 100조 원에 육박하지만, 정부가 보장하겠다는 이른바 장기 추세선은 81조 원대다. 지난해보다 줄지 않을 뿐, **법이 정한 몫에 견주면 약 18조 원이 사라진다.** 말로는 줄이지 않겠다고 하지만, 의무교육을 떠받쳐 온 교육교부금은 사실상 줄어드는 것이 맞다.

학생이 줄어도 학교의 책임은 줄지 않는다

2025년 기준 교부금의 80.7%는 인건비였고, 학생 수가 줄어드는 동안에도 초·중·고 학교 수는 최근 5년간 161곳 늘었다. 교직원 인건비와 학교 운영비, 시설 안전·관리비는 학생 수가 아니라 학교와 학급 단위로 발생하는 고정비용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오늘날의 초등학교는 20년 전의 초등학교가 아니다. 늘봄과 돌봄, 기초학력 보장, 정서·행동 위기학생 지원, 통합교육, 이주배경학생 지원, 안전관리와 디지털교육까지 학교가 진 책임은 계속 늘어왔다. **학생 수만을 재정수요의 대리변수로 삼는 것은, 오늘날 학교의 기능을 수십 년 전 교과수업 수준으로 축소해 바라보는 것이다.** 헌법 제31조 제6항은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교육이 정권과 그해의 경기에 흔들려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교육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겠다는데서, 법률이 보장해 온 재원의 몫을 매년의 성장률과 학령인구 추계에 맡기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교부금 축소의 부담은 결국 교실의 아이들에게 돌아간다

교부금은 추상적인 숫자가 아니다. 학교로 내려와 학급의 수와 교실의 온도, 급식과 통학로의 안전으로 실현된다. 재정이 줄면 가장 먼저 미뤄지는 것은 눈에 잘 띄지 않는 것들이다. 과밀학급 해소와 기초학력 지원, 상담과 정서 지원이 뒤로 밀리고, 학교 운영비와 교수학습활동비, 체험학습과 도서구입이 깎이며, 노후 교실과 화장실, 냉난방과 급식시설, 통학환경 개선은 다음으로 미뤄진다. 그리고 **학교가 하지 못한 몫은 결국 가정의 부담으로 넘어간다.**

교사를 줄이는 일도 결국 아이들의 교육환경 문제다. 교사의 수는 곧 학급의 수이고, 학급의 수는 한 교실에 몇 명이 앉느냐를 결정한다. 공립 초등학교사 신규 선발 규모는 2025학년도 4,272명에서 2026학년도 3,113명, 2027학년도 사전예고 2,821명으로 해마다 줄었고, 정부는 2030년까지 2,500~2,800명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학급당 학생 수를 줄여 아이 한 명 한 명을 더 살피자는 논의가 재정과 함께 사라지는 것이다.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역일수록 타격은 크다. 어느 지역의 학교에 다니느냐에 따라 아이가 받는 교육이 달라진다면, 그것은 **헌법 제31조 제1항이 보장한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무너지는 일이다.**

교육 전 영역에 대한 국가 투자는 확대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 재원이 초·중등교육 재정의 삭감이어서는 안 된다. 교육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명분으로 또 다른 교육영역의 재정을 줄이는 것은 해결이 아니라 자리바꿈이다. 정부에 요청한다. 단순한 경제논리로 교육을 재단하지 말라. 내국세 20.79% 법정 연동 원칙을 유지하고, 학령인구

감소를 교육재정 삭감의 근거로 삼지 말라. 무엇을, 왜 바뀌야 하는지부터 현장의 교사와 함께 논의의 원점에 앉으라. 초등교사노동조합은 아이들의 배움에 들어가는 단 한 명분의 예산과, 그 배움을 지키는 단 한 명의 교사도 '비계'로 취급되는 것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2026. 8. 6.

초등교사노동조합